

## ‘비핵·개방·3000’과 북한의 핵포기

### 홍 우 택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비핵·개방·3000’은 핵문제와 경제지원을 연계시켜 (Issue-Linkage) 북한이 핵포기를 하면 남한은 대규모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만들어 준다는 구상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구상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유도전략을 제시하지 않은 채 경제지원과 연계시킴으로써 긴장만 조성시킬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 정부의 ‘포용정책’ 계승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케 하는 정책방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떠한 정책방향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길인지는 분명치 않다. 염려스러운 점은 만약 북한의 핵무기 보유 중요도가 남한의 대북정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에 비해 크다면,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는 수월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다.

### 북한의 핵보유 의미와 핵포기 가능성

대북포용정책이 한창 추진 중이었던 지난 2005년 2월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다. 2002년 1월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지 대략 3년만의 사건이었다.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해석을 크게 나누어 보면, 미국과 관계개선을 위한 협박용이라고 하는 시각이 있는 반면,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억제하고 김정일 정권의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사실 적지 않은 국가들이 핵무기가 가져다주는 다목적과 정책적 도구의 역할 때문에 핵무기를 가지려는 유혹에 빠져들었고, 북한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렇다면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어떠한 카드들을 손에 쥐게 된 것일까?

우선 북한은 남한에 대해 군사·안보·전략적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남북간 재래식 무기의 비교우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북한은 핵무기 보유로 재래식 무기에서의 열세를 만회해 버렸다. 남한의 동맹국인 미국의 핵을 계산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좁은 한반도에서 북한 핵은 상호 핵의 균등상태(Nuclear Parity)를 만들어 주었다. 즉, 핵무기를 사용한 상호공격은 남북한 모두의 파멸을 의미한다. 고전적 핵억지이론(Classical Deterrence Theory)에 의하면 이러한 핵의 균등상태가 가장 안정된 상태이며, 핵전쟁 발발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이에 반해 세력전이이론(Power Transition Theory)에서 확장된 다른 핵억지이론에 의하면 현상유지(Status quo)에 만족치 않는 국가에 의한 핵보유는 핵의 균등상황 여하를 막론하고 전쟁의 위험성을 높인다고 본다. 중요한 점은 두 이론 모두가 상대방보다 우월한 핵능력에서는 물론이고 핵의 균등상태에서도 어느 정도의 핵억지력을 갖출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다.

결국 핵무기 보유로 인한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북한은 상대방의 정책행동반경을 축소 시키는데 성공했고, 이에 따라 핵을 미국과의 관계개선용 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핵은 북한으로 하여금 안보적 측면에서의 상대적인 전략적 열세를 극복하게 하였고, 적어도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억제하는데 성공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핵이 위와 같은 성격을 갖는다면, 북한이 이런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매우 쓸모 있는 정책카드를 버리는 동시에 무장해제를 한다는 것과도 같다. 2008년 신년 공동사설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북한이 외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위협인식은 변함이 없으며, 이에 따라서 군사력 강화를 통해 강성대국을 건설하자는 선군 정치를 계속해서 표방하고 있다. 이렇듯 핵무기 보유가 군사력을 최우선시하는 선군정치에 필수불가결한 수단임을 감안한다면 북한의 핵포기에 대한 전망은 더욱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 북한의 체제유지수단으로서 핵

그렇다면 북한은 남북한 간의 체제경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체제의 몰락 이후 한반도에서도 남한이 체제승리를 거두었다고 보고 있다. 우리가 체제경쟁에서 승리했으니 북한을 포용해서 화해의 상대로 보고 교류를 증가시키면 북한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북한의 지도부가 북한체제를 남한에 비해 열세한 체제라고 생각한다면, 남한과의 교류증가로 인한 개방 폭의 확대나 북한사회 내부로 시장경제의 침투를 우려할 것이다. 즉 북한은 경제발전을 원하기는 하지만 남한에 대한 개방은 체제유지에 위협하다고 볼 것이며, 가능하다면 개방하지 않고 경제지원만 확보하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러한 북한에게 핵은 그들의 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효용성이 높은 수단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이 핵위협을 통하여 남한에 경제지원을 요구했을 때 우리는 그들의 요구를 아무렇지 않게 무시해 버릴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 북한의 핵포기와 경제지원의 연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핵포기와 경제지원을 연계시키고 있다면, 과연 어떠한 조건이 성립되어야 북한은 선 핵포기 요구를 수용할까?

A라는 이슈와 B라는 이슈를 연계시켜 상대방으로 하여금 A에 협력하게 만드는 조건은 B에서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이득(payoff)이 A에서 잃는 손해를 덮고도 남을 만큼(+  $\alpha$ )이 되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체제유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이론적으로 볼 때 북한이 체제유지를 걱정하지 않을 만큼의 경제수준은 적어도 남한과 비슷한 경제적 수준이다. 남한이 제공하는 경제지원을 통해 북한이 체제유지를 걱정하지 않을 만큼의 경제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판알을 튕기기 시작하는 북한 지도부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이 중국의 2020년 목표인 소강사회(小康社會)를 북한에서 실현시켜 줄 수 있다면 그들은 이 구상을 한번 냉정히 계산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북한을 약속도 잘 지키지 않는 비이성적인 존재로 묘사하기도 하고, 한 핏줄을 이어받은 같은 민족이라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은 북한을 이와 같은 시각으로 대하려 하지 말고 냉혹하리만큼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권력에 의해 움직이는 국가로 보았으면 한다.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실용주의 전략은 이러한 시각 위에서 싹을 틔울 수 있다. 정책에는 '발표된 정책'(Declared Policy)이 있고 발표되지 않은 '의도된 정책'(Intended Policy)이 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의도된 정책이 있다면, 이는 진보나 보수 어느 한쪽으로 쏠림이 없이 합리적인 시각으로 구상되었으면 한다.

